

# 中共의 經濟改革 그 實體와 展望

~ 1984. 10. 20 「經濟改革에 關한 決定」을 中心으로 ~

申 泰 容

〈産業研究院 地域5室 責任研究員〉

## 머 리 말

1984년 10월 20일 中共黨 12期 3中全會는 1985년부터 都市經濟改革을 본격적으로 推進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經濟體制改革에 關한 決定)”을 發表하였다.

이 決定은 中共黨의 앞으로의 基本的인 政策 方向을 提示하는 文件이라는 점에서 비록 經濟改革의 아주 상세한 內容을 담고 있지 않으나 1978년 12월 中共黨 11期 3中全會 이후 전개되어 온 中共經濟의 調整·改革 方向을 再 確認하였다는 점에서 현 中共의 經濟改革 주도 세력인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實用主義者들의 權力基盤이 더욱 鞏固해졌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 “決定”은 크게 10개 部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內容은 ① 改革은 中共經濟發展을 위해 긴급히 요청된다. ② 改革은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③ 企業의 活力을 증진시키는 것이 經濟改革의 중심 課題이다. ④ 價值法則을 고려한 計劃體制를 수립하여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발전시킨다. ⑤ 合理的인 價格體系를 수립하여 이를 충분히 活用한다. ⑥ 政府와 企業의 역할을 分離한다. ⑦ 各種 經濟責任制를 확립하고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을 관철한다. ⑧ 對內, 對外的 經濟·技術 交流를 강

화한다. ⑨ 經濟管理 幹部를 養成한다. ⑩ 改革에 대한 中共黨의 指導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決定”은 그 범위가 전 經濟分野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中共經濟를 계속 추적해 오지 않은 사람이 一見하기에는 획기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決定”은 1978년 12월의 中共黨 11期 3中全會의 커뮤니케나, 1979년 6월의 5期 全人代 2次會議의 決議, 그리고 1979년 이래 中共이 취해온 改革에 대한 각종 “實驗”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① 中共黨 12期 3中全會의 “決定”이 나오기까지의 背景을 中共의 4個 現代化 추진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본 후 ② 이 “決定”을 중심으로 經濟改革의 주요 內容을 검토하고 ③ 改革 추진에 따른 問題點 및 향후 展望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I. 經濟改革의 背景과 推移

毛澤東의 死後,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實用主義 세력의 등장을 보증해 준 것으로 評價되는 中共黨 11期 3中全會(1978년 12월)의 커뮤니케를 통해 中共은 앞으로의 全黨 活動의 중심은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 등 4個 現代化에 있다고 宣言한 바 있다.

毛澤東 생존시에 中共은 經濟運用的 合理

性이나 專門知識(專)보다는 政治思想(紅)을 강조해 왔으며 生産力보다는 生産關係를 중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代化가 生産力の 增強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認識下에서 中共의 實用主義者들은 紅보다는 專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現代化」라는 것이 生産力の 擴充 뿐만 아니라 經濟의 運用方式도 現代化(=合理化)하는 의식구조의 轉換도 隨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運用的 合理化에는 무엇보다도 意思決定의 分權化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意思決定의 集權化는 개별 經濟主體의 具體的인 狀況을 무시하게 되는데 특히 中共과 같이 廣大한 國土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集權化로 야기되는 問題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問題에 관해 中共黨 11期 3中全會 코뮌니케는 “현재 우리(中共)의 經濟管理體制上的 중대한 缺點은 權限의 과도한 集中이다. 과감하게 權限을 下放하여 地方 및 工農業企業에 보다 많은 經營管理上的 自主權을 부여해야 한다. 즉 각급 經濟, 行政機構의 대폭적인 簡素化에 착수하여 대부분의 權限을 企業으로서의 專門公司 또는 聯合公司에 委讓해야 한다. 또 단호하게 經濟法則 및 價値法則에 입각하여 經濟를 운영하고 幹部와 勞動者의 생산 의욕을 充分히 發顯시키도록 誘導해야 한다”(“中共 11屆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 公報”, 「人民日報」, 1978. 12. 24)고 밝히고 있다.

經濟運用に 관한 分權化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은 調整計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치하는 바와 같이 中共은 1978년 3월 5期 全人代 1次會議에서 120個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985년까지의 投資規模가 과거 28년간의 投資規模와 같을 정도로 방만한 소위 10個年計劃을 發表하였던 바 있다.

이 計劃은 投資財源, 專門技術人力 등의 절대적인 不足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重工業 轉중의 開發計劃으로서 實施後 불과 1년여만에 白紙化되고 1979년 6월 5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 調整計劃으로 代替되었다.

이 調整計劃을 통해서 中共은 經濟運用的 기

본 方向을 「調整, 改革, 整頓, 提高」 등 八字方針으로 요약 提示하였다. 中共은 1958~60년의 大躍進 운동 失敗 이후에도 「調整, 強化, 充實, 向上」이라는 八字方針에 따라 經濟調整을 시행한 바 있다. 1960년대 前半의 調整과 비교해 볼 때 1979년 이후의 調整은 “改革”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八字方針의 改革은 企業管理를 전문 經營人 중심의 企業管理 시스템으로 改造하고 종전의 均等分配原則을 勞動生産性에 따른 能率分配 원칙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금번 都市經濟體制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改革에 관한 決定의 기본적인 方向은 이미 1979년 調整計劃 발표 당시의 八字方針에 提示되어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中共의 經濟改革推移를 部門別로 정리해 보자. 먼저 農業部門에서는 1978년 12월 中共黨 11期 3中全會에서 「農業의 發展을 加速化하기 위한 약간의 問題에 대한 決定」 및 「農村人民公社 工作條例」가 討議에 부쳐진 이후 ①人民公社 生産隊의 自主權尊重 ②各중責任制의 確立과 勞動에 따른 分配 원칙의 貫徹 ③家庭副業의 發展과 自留地의 定着 ④農村 自由市場 交易의 開放 ⑤農産物, 副業 生産物의 國家收買價格 引上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諸改革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1983년 여름에는 全農家の 90% 정도에 契約를 기반으로 하는 生産責任制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中國研究所編, 「新中國年鑑 1984年版」(東京:大修館書店, 1984), p. 249.).

한편 工業部門의 改革은 1979년 7월 國務院이 「國營工業企業 經營管理 自主權 擴大에 관한 약간의 規定」을 가결한 이래 自主權 實驗企業이 1979년말에 4,000여개, 그리고 80년 6월에는 6,600개로 擴大되었는데 이 實驗企業이 豫算에 편입된 全國營企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企業數에서는 16%에 불과하였으나 生産額의 60%, 그리고 利潤額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日本貿易振興會, 「中國の經濟體制改革の現狀と展望」(東京:日本貿易振興會, 1983.), p. 13.). 이것은 결국 10·20 經濟改革 決定이 발표되기 이

전에 이미 工業企業의 상당部門에서 改革이 “實驗”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農業 및 工業部門에서의 經濟改革 움직임을 극히 단편적으로 一瞥하였다.

調整計劃의 기본방향을 要約, 提示하고 있는 八字方針의 우선 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79년 이후 中共經濟, 특히 工業部門(都市經濟)은 改革보다는 輕工業과 重工業間의 比例關係失調의 解消, 기존 企業의 設備更新 등 調整쪽에 力點이 두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改革에 관한 論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改革은 中央部門, 地方, 企業, 農民, 勞動者 모두에게 관련되는 문제이며 그만큼 實施가 복잡하고 문제의 解決에도 長時間을 요한다. 改革이 調整에 비해 不振한 양상을 보였던 것도 改革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改革과 관련하여 中共의 經濟管理에 있어 “計劃이 주인가, 市場機能이 주인가?” 하는 論難이 있었던 것도 역시 改革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에 基因한다.

이 문제에 관한 見解는 크게 均衡重視論者인 陳雲-鄧力群을 중심으로 하는 調整派의 見解와 改革重視論者인 趙紫陽-薛暮橋를 중심으로 하는 改革派의 見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調整派는 行政手段에 의한 指令性計劃이 社會主義 經濟의 基本的 성격이라는 古典의 見解를 보이고 있으며 改革派는 단순한 行政手段 뿐만 아니라 價格政策이나 稅制 등 ‘經濟手段’을 잘 활용하여 國家計劃의 實行을 保證해야 한다고 改革을 보다 폭넓게 解釋하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經濟의 管理方式에 대한 中共 指導部의 見解는 1982년 9월 中共黨 12全大會에서 일단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同會議에서 胡耀邦은 “國營의 基幹産業에 대해서는 指令性計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集體所有制 企業에 대해서도 重要 物資를 생산하는 企業에 대해서 指令性計劃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덜 重要한 物資를 生産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指導性計劃을 실시한다(『人民日報』, 1982. 9. 8.)”

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改革에 관한 基本 立場은 10월 20일 “改革에 관한 決定”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中共이 都市經濟(=工業部門)의 改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改革案을 발표하게 된 것은 農業部門 改革의 成果를 배경으로 그동안 企業에 대한 集權的 管理로 야기된 問題點들을 解決함으로써 工業部門의 經濟效率을 향상시키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企業에 대한 集權的 管理의 폐해로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企業이 行政機關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으며 自主的으로 생산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그에 따라 大規模 生産에 필요한 企業과 企業 사이의 經濟的인 連繫가 파괴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그 結果 企業 및 勞動者는 積極性, 創造性을 잃게 된다.

현재 100萬個所 8,000여만명의 종업원, 그리고 中共 財政收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都市企業의 조직 및 管理方式을 改革하지 않고서는 中共의 經濟改革이 전혀 所期의 成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이번 “改革에 관한 決定”의 근본적인 출현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와 企業間의 關係와 企業과 從業員間의 關係가 명확히 確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關係 定立의 기초 위에서 經濟效率을 提高시키기 위해 經濟管理의 分權化 및 價格體系의 合理化 對內外 經濟技術 交流의 強化, 經濟管理 幹部의 養成 등의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改革案은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는 이들 內容을 項目別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經濟改革의 內容

都市 經濟改革의 근본적인 目的은 企業과 勤勞者들의 積極性, 창의성을 誘導하여 經濟效率을 向上시키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中共은 經濟管理의 分權化를 指向하는 다음과 같은 改革措置를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1. 行政과 企業의 分離

이번 改革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行政과 企業은 分離된다. 國家는 다만 전반적인 計劃과 法律的 手段을 통하여 企業에 대해 필요한 管理, 檢査, 指導 및 調整을 행한다. 이것은 과거 1978년까지 企業이 行政機關의 부속물로서 독자적인 決定權을 갖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管理方式이다.

이제 企業은 工場長責任制下에서 自主的인 運營權을 갖게 되었다. 企業의 自主權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企業利潤을 全額 上納해야 하였던 것이 이제는 企業이 國家와 契約을 締結하고 契約에 따라 利潤을 留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利潤留保方式에는 1979년 이후 3가지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그 방식은 ① 計劃利潤과 計劃超過利潤을 결합시킨 留保方式(각각 상이한 留保率이 적용됨) ② 全額利潤 留保方式(모든 利潤에 대해 동일 比率를 留保함) ③ 增加利潤留保方式(1978년의 利潤을 10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利潤에 대해 일정비율을 留保함) 등이었다.

이러한 利潤留保 방식은 일단 企業 자체의 利潤留保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利潤全額 上納制에 비해서는 企業의 利潤動機를 상당히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利潤留保 방식은 千差萬別인 개별 企業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여 基準利潤 및 留保率을 策定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은 業種間, 企業間에 또다른 不平等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中共은 1983년 6월 이후 法人稅制度를 採擇해 오고 있다. 이를 中共式으로 表現하면 利改稅(利潤上納을 租稅로 바꿈)인데 이 利改稅로의 改革은 2단계로 나누어 實行되어 왔다. 그 첫단계는 企業利潤에 대해 55%의 法人稅를 부과하고, 나머지 利潤에 대해서도 調節稅를 부과한다. 다음 두번째 段階는 價格體系의 調整이 끝나는 시점에서 法人稅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中共은 1984년 5월 6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 1984

년 10월부터 利改稅의 2段階 조치를 서서히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趙紫陽, “政府工作報告”, 「大公報」, 1984.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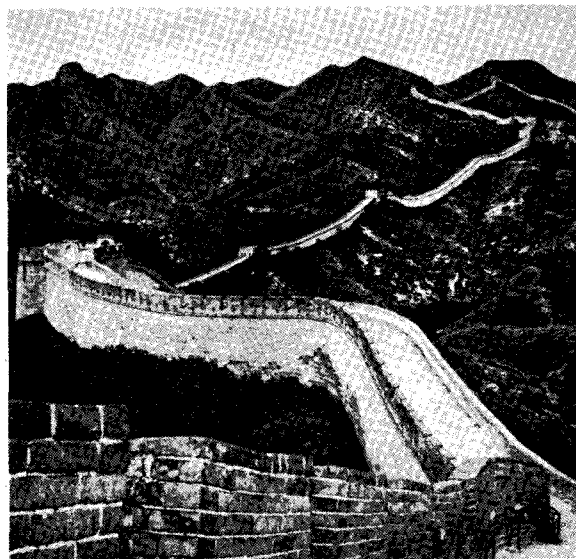
國家와 企業間的 關係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改革은 工場長의 選出 方式이다. 종래에는 工場長의 任免은 企業의 上級 行政機關이 관장해 왔다. 이때 工場長은 工場 經營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보다는 政治思想에 대한 이른바 ‘充實性’이 선발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工場長 責任制의 定着과 함께 工場長의 專門知識·經驗이 강조되어 1982년 1월에 公表된 「國營企業의 工場長 活動 暫行條例」에서는 工場長은 5년 이상의 工場經營 經驗을 가진 者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工場長의 任命에 대해서도 工場長을 企業의 勞動者·職員代表大會에서 選出하거나 外部에서 公募하는 方法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企業의 自主權과 관련하여 중요한 變化는 企業이 독자적인 生産計劃 및 自主 販賣權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企業은 國家計劃 이외에 市場의 需要 變化에 即應하여 補充計劃을 실시할 수 있으며 國家計劃에 의해 결정된 製品에 대해서도 市場의 變化에 맞추어 品種, 規格 등의 變更이 가능하다.

그리고 計劃生産量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自己 販賣權이 認定되고 있다. 1981년 首都鐵鋼公



司의 自己販賣分은 총판매량의 16.4%이었으며 1981년 1~9월 사이에 消費物資의 自己販賣分은 社會商品小賣總額의 9.1%를 차지하였다 (日本貿易振興會, 前掲書, p. 29).

## 2. 企業에의 職員選拔權 부여

중전에는 中共의 企業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勞動者를 자유로이 고용하기가 곤란하였고, 勞動者도 일단 고용되면 해고될 염려는 없는 대신에 轉職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硬化된 고용제도에서는 經濟의 現代化를 기대할 수 없다.

制度改革의 움직임은 1979년에 나타났다. 즉 同年 7월 北京에서 최초로 國營企業, 集體所有制企業 勞動者에 대한 採用試驗(약 4萬名)이 實施되었다.

또 1982년 후반에는 勞動者의 新規 모집에 契約僱傭制(合同制)라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하였다. 이것은 勞動者의 採用時에 企業과 勞動者 사이에 職責, 權利 및 義務를 規定한 契約을 맺는 것이다. 契約期間은 일반적으로 2~3년이며 企業은 勞動者가 契約을 위반하면 解雇하고 한편 勞動者도 正當한 理由로 어떤 職場에서 退職하였을 경우 다른 職業을 구할 수 있다. 1983년초에 北京, 上海, 江蘇 등 9개 省市에서 이러한 契約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僱傭者數도 1984년 9월말 기준으로 78萬名에 달하고 있다(「中國通信」, 1984. 11. 12.).

企業과 勞動者 사이의 契約은 公司(企業) - 工場, 工場 - 作業單位, 作業單位 - 班·組, 班·組 - 個人으로 세분화되어 최종적으로는 公司에서 個人에게까지 이르는 피라미트형의 수많은 契約이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首都鐵鋼公司의 예를 보면 末端段階에 이르기까지 23萬 5,000件이나 되는 契約이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日本經濟新聞」, 1984. 3. 8.).

이처럼 中共은 企業에게 職員の 채용권을 부여하고 企業은 다시 職工과의 契約制度를 통해 勞動規律의 확립과 生産성의 향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 3. 賃金體系の 調整

勤勞者의 積極성 및 창의성을 誘導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變化는 賃金體系の 調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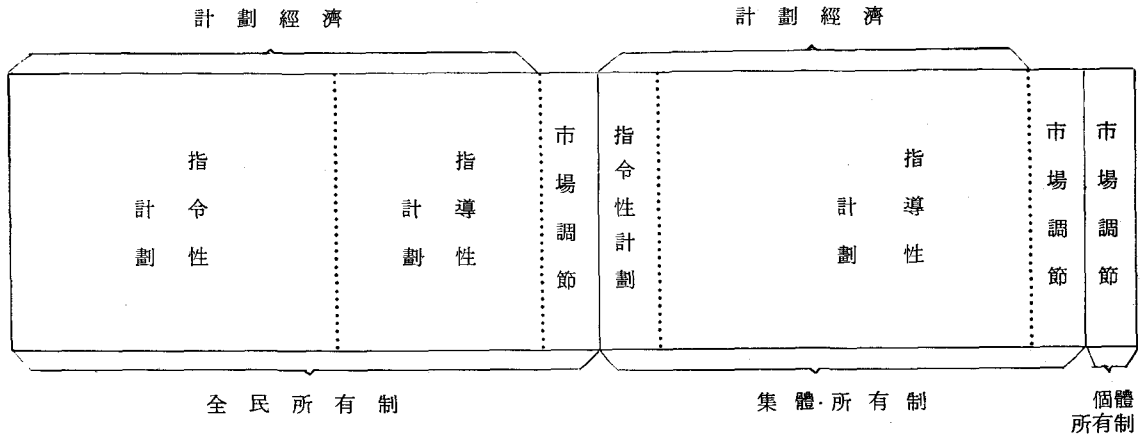
중전에는 賃金水準은 투여 勞動時間에 의해서만 決定되었으며 8級賃金制를 기초로 하여 等級의 上向調整만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能率給制度가 實驗企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81년에는 賃金總額의 20% 정도를 企業의 利潤目標, 生産量, 品質水準 등 각종 成果指標에 연동시키는 連動賃金制가 實驗적으로 導入되었다. 現行 中共 國營企業의 賃金體系는 基礎賃金, 經常的 賞與金, 각종 補助金으로 구성되는 基本賃金과 여기에 1回性的 報獎金을 加算시킴으로써 「多勞多得, 不勞不得」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方向으로 再編되고 있다.

또 幹部의 給料은 낮게 억제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思考方式이 바뀌어 예컨대, 首都鐵鋼公司 최고 幹部의 賞與金 分配係數를 높게 策定하고 있는 것도 이번 經濟改革案에서 知識人, 專門家를 우대해 나가겠다는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 4. 經濟管理의 分化 및 價格體系の 調整

改革과 관련된 經濟管理의 分權化에 관한 論議는 經濟改革의 背景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計劃經濟를 주로 하고 市場經濟를 補助적으로 活用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計劃經濟를 주로 한다는 것은 完全히 指令性計劃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國家計劃과 民生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部門은 指令性計劃을 실시하고 나머지 部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指導性計劃 또는 完全한 市場調節을 실시한다.

中共에서는 國家가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정하여 統一購入, 統一販賣를 실행하고 있는 商品을 第1類商品(食糧, 棉花, 石灰 등)으로, 國民生活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物資



資料 : 中國研究所, 「新中國年鑑, 1984年版」, p. 63.

〈그림-1〉 中共의 經濟管理 시스템

로서 計劃收買를 실시하고 있는 商品을 第2類 商品(茶, 담배, 鐵線 등 300여종) 그리고 1·2類 商品을 제외한 모든 商品을 3類 商品으로 分類해 놓고 있다.

여기서 第1類, 第2類 및 第3類 商品 가운데 輸出이나 특수한 용도를 가진 商品은 計劃 商品이며 第3類 商品 가운데 計劃 商品 이외의 모든 商品은 非計劃 商品이다.

한편 中共의 價格管理方式을 보면 ① 國家規定價格(國家定價) ② 浮動價格(國家規定價格을 기준으로 上方, 下方 또는 上下方의 變動을 인정함) ③ 協議價格(購買, 販賣者 사이에 價格을 협의하여 決定) ④ 自由市場價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中共은 1979년 11월 일부 農産物, 農副産物, 特産物, 日用雜貨 등 1萬個 品目を 그리고 1983년 9월에는 日用品 350品目を 統制價格에서 解除하는 등 國家規定價格의 범위를 축소시켜 왔다.

그러나 計劃價格(國家規定價格 및 浮動價格)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商品은 品目數에서는 10~20%에 불과하지만 販賣額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日本貿易振興會, 「中國經濟」(1983. 8), p. 7.) 비중이 큰 重要 物資에 대해서는 여전히 計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製品價格의 計劃性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中共은 1979년에 第4機械工業部(현재는 電子工業部)에서 일부 電子製品에 대해, 그리고 1980년 1월에 第1機械工業部(현재는 機械工業部)에서 16種의 機械製品에 대해 각각 浮動價格制를 적용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計劃價格의 變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指導性計劃”의 적용 범위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5. 對內外 經濟技術交流의 強化

集權的 計劃管理制度下에서는 각 經濟主體 사이의 連繫가 파괴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中共처럼 광대한 國土를 지닌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中共의 流通체계는 集權的 관리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또한 不合理한 價格體系와도 관련되어 未發達 상태에 있다. 流通體系의 改革과 관련하여 中共은 1984년 5월 6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도 農民의 원거리 輸送販賣의 認定, 供銷合作社의 民營化 등을 통하여 流通體系를 改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1984년 10월의 改革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中共의 産業立地는 沿岸은 상당한 정도 工業이 발달되어 있으나 內陸·邊

境地域은 工業基盤이 취약하고 社會間接資本도 未備되어 있어 地域間 不均衡이 심각하다. 對內 經濟·技術交流의 강화는 이러한 地域間不均衡의 解消을 위한 前提條件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 改革案에서 對外經濟·技術交流의 확대에 대하여 “對外的인 閉鎖自守로는 現代化를 實現할 수 없다”고 밝히고 11期 3中全會 이후 中共은 對外開放을 長期的인 기본 國策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對外開放 조치의 일환으로 中共은 貿易權限의 分權化, 企業에의 貿易自律權 부여를 근간으로 하는 對外貿易 管理制度의 개선을 꾸준히 推進해 왔으며 廣東省, 福建省의 經濟特區 운영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1984년 5월 6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 14個 沿岸都市 및 海南島에 대한 開放이 공식화된 이래 100% 外資企業까지 진출을 許用하고 外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등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中共이 14個 沿岸都市 및 海南島를 개방하기로 한 것은 沿海地區는 工業基盤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을 뿐더러 科學技術力이 강하고 對外經濟·技術交流의 經驗도 풍부하므로 이 強點을 충분히 활용, 새로운 技術을 적극적으로 吸收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趙紫陽은 지난 6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 「政府活動報告」를 통해 14個 沿岸都市 및 海南島의 開放을 결정하게 된 背景에 관해 “바야흐로 世界에는 새로운 技術革命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시기를 정확히 捕捉하여 새로운 科學技術을 選擇, 應用하여 現代化 건설을 가속화하고 先進國과의 經濟的·技術的 격차를 좁혀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中共 指導部의 技術吸收에 대한 堅決한 認識을 피력한 바 있는 것이다(趙紫陽, “政府工作報告”, 「大公報」, 1984. 6.1).

### 6. 經濟管理 幹部の 養成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資本 投入量의 증대뿐만 아니라 勞働의 質的인 高級化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앞에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中共은 毛澤東 시대에 專보다는 紅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文化大革命으로 인한 大學教育의 中斷은 中共의 人材養成에 10年間의 空白을 초래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U.S. CIA, China: Post-Mao Search For Civilian Industrial Technology (Washington, D.C.: CIA, 1979), p.v.).

技術者 및 專門人力의 不足이 經濟發展의 근본적인 制約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1984년 10월의 改革案에서도 앞으로 工場長, 技術者, 經營專門家, 會計士 등의 養成에 力點을 ทุ่ม쳐 經濟管理의 效率性 提高를 도모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中共은 전국적으로 文盲 또는 半文盲 상태인 人口가 2억 3,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12歲 이상 人口의 23.5%), 10億이라는 거대한 人口에 비해 大學在學生數는 1982년 기준 115萬명에 불과하다(中國研究所編, 前掲書, p. 268).

科學技術의 經濟發展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認識하여 中共은 1983년 1월 中共黨과 國務院은 趙紫陽을 組長으로 하는 國務院科技指導小組를 발족시키고 “經濟에 얼굴을 向한 科學”의 長期發展計劃 수립에 腐心하고 있기도 하다.

## Ⅲ. 問題點 및 展望

이번 經濟改革案은 머리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中共黨의 기본적인 政策方向을 提示한 것이며 改革의 細部指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改革의 成功 가능성 여부를 評價하기에는 時期상조라 하겠다.

한편 改革이 실패할 경우 中共 實用主義者들의 政治生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冒險性」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종합적인 改革案이 하나의 公式文件으로 表出되었다는 것은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實用主義者들의 權力基盤이 더욱 다져지고 있다는 判斷을 토대로 적어도 당분간은 經濟改革이 推進될 것이라는 前提下에서 改革에 따른 몇가지 問題點과 展望을 記述하기로 한다.

첫째, 經濟改革이 순조롭게 進行된다면 改革

案이 目標로 하고 있는 企業 및 勞動者의 적극성·창의성을 誘導함으로써 經濟效率이 어느정도 提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經濟改革의 관건은 앞으로 中共의 價格體系가 여하히 合理的으로 調整될 수 있는가에 놓여 있다. 앞서 經濟改革의 內容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中共이 결코 市場經濟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며 計劃經濟를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각종 經濟計算의 근거로서 價格이 어떻게 算定되느냐 하는 問題는 改革의 成敗와 관련된 중대 問題가 아닐 수 없다. 1979년 이래 農産物 收買價格의 수차에 걸친 引上, 1983년 1월 化纖製品 價格의 引下, 1984년 1월 機械製品에 대한 品質格差制 도입 등 中共은 價格體系의 調整을 부단히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中共에는 ①工業製品과 農産品價格 사이의 隔差 ②에너지 가격 사이의 隔差(石炭價格이 電力·原油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싸다) ③重工業部門의 높은 가격에 따른 輕工業分野의 압박 ④石炭, 鐵鑛石 등의 原燃料는 저가격이지만 鋼材나 機械製品은 대부분이 「高價利大」 ⑤同類產品 사이의 심한 격차(예컨대 電球는 대소에 따라) ⑥代用品(가루비누와 비누, 綿製品과 化纖製品 등) 사이의 比價 불합리 ⑦輸入品과 國産品과의 比價 불합리 등 허다한 問題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價格體系의 불합리한 상태를 計劃體制의 틀 속에서 고쳐나간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어서 가격체계의 調整에는 적어도 앞으로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분적인 市場經濟의 導入으로 인플레이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看過할 수 없다. 改革案에서는 인플레이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加工企業은 原資材의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압력을 기본적으로 企業內의 生産性 향상을 통해 극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中共은 6次 5個年計劃에서 전국 國營企業의 製品 原價를 매년 1~2%씩 절감한다는 目標를 세워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1981, 82년의 경우 원가가 오히려 上昇하였으며 1983년에도 전년 대비 0.4% 하락하는 데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固定資産

원가 100元當 實現 生産高도 1980년 101元에서 1982년에는 95元으로 떨어지고 있다(KIET, 「共產圈經濟」, 1984. 3. p. 53. 및 中國研究所, 前掲書, p. 196.).

전반적으로 이러한 生産性 관련지표들이 하락하거나 또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 壓力을 生産性 향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의 위험성이 內在되어 있다고 하겠다.

네째, 이번 改革案에서 國家計劃을 초과 달성한 生産物에 대해서는 企業의 自主的인 販賣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問題는 計劃生産量을 둘러싼 企業과 行政機關 사이의 協商力일 것이다. 重要 物資에 대해 計劃을 放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生産量의 策定 단계에서 기존 生産能力을 어떻게 評價하고 어떠한 수준의 生産量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企業의 意思를 이러한 決定過程에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企業 自主權의 幅은 可變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다섯째, 改革措置의 실시에 따라 生産活動이 자극되고 賃金引上의 效果 등으로 所得水準이 向上될 것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所得隔差가 나타남으로써 長期的으로는 社會的 不安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對外開放幅의 확대로 최근 수년간의 추세가 연장될 것이며 美·日을 비롯한 對資本主義諸國과의 貿易 및 資本·技術協力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몇가지 問題점 및 展望을 살펴보았다.

中共의 經濟改革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은 計劃經濟와 資本主義的 要素와의 接木에는 基本的인 制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中共經濟가 대내적으로는 經濟效率의 극대화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貿易 및 資本·技術의 對外交流를 강화해 나아가리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經濟改革은 1985년부터 漸進的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展望되므로 향후 中共의 경제정책 동향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